월/요/광/장

조기인

경제위기와 은행의 딜레마

로버트 엑슬로드(Robert Axelrod)라는 경제학자는 1984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역설을 제기했다. 이 역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염두에 두도록 모형화하는 게임이론으로 경제학계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신이 범죄를 함께 저지른 동료와 같이 붙잡혀 구금되었다고 하자. 당신과 동료는 잡히기 직전 서로 묵비권을 행사하자고 약속했다. 그리고 구금된 이후에는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독방에 각각 갇혔다.

그 때 경찰이 당신에게 협상안을 제시했다. "당신이 동료의 죄를 증언하고 동료는 묵비권을 행사하면 당신은 석방되고 동료는 3년 형을 받는다. 당신과 동료가 모두 서로의 죄를 증언하면 둘 다 2년 형을 받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1년 형을 받는다." 그러면서 당신의 동료도 동일한 제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먼저 동료가 당신을 배신하고 증언하는 경우를 상정하자. 이 경우 당신도 증언을 하면 2년 형, 당신은 의리를 지켜 묵비권을 행사하면 3년 형을 받는다. 따라서 당신은 증언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동료가 약속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하자. 이 경우 당신이 증언하면 석방, 당신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1년 형을 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당신은 증언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동료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추론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과 동료는 모두 서로를 배신하고 증언하여 각각 2년 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최선이 아니다. 당신과 동료가 서로 약속을 지켜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면 각각 1년 형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내생적 불안정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내생적 불안정성이란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한 행동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적 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초체질이 우수한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은 그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서로 약속하여 추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상환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은행이 대출의 부실화를 염려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추가 대출을 하지 않아 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면 약속대로 지원한 은행들만 대출금 회수에 애로를 겪게 된다.

개별은행들이 이와 같이 다른 은행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면 우량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은행이 추가 지원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이는 기존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즉, 대출의 건전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개별은행들의 시도가 모이면 오히려 기존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기업 신속자금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채권은행들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우량기업에 대한 공동 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금융시장의 내생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혹자는 은행도 사정이 좋지 않은데 대출을 유도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고 우려할 수도 있으나, 기초체질이 우수한 기업은 살리는 것이 기존 대출의 건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길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도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체질을 한층 개선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은행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서길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정경진

긍정의 미학

요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가계소비도 위축돼 국내 경기마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연일 접하면서 오늘의 현실이 더욱 더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생각과 여유있는 마음가짐으로, 직면해 있는 혹독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세계적 경제난에도 우리만의 독특한 삶의 자세로 이를 굳건히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자세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 중의 하나가 '빠름의 미학'이다. 혹자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습관이 우리 나라를 멍들게 한다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3년 전, 업무 차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를 방문했을 때 그곳 주민들의 여유있는 삶, 고풍스럽고 자연과 조화된 도시의 아름다움에 반해 한순간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 음식점에서 약 40분이 지나도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 종업원을 보고 그 생각은 점차 시들어졌다. 이 같은 일은 벨기에에 가서도 이어졌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를 가도 달라지지 않았다.

작은 것 하나에도 그 나라의 문화가 배어 있고, 삶의 자세가 느껴지는 법인데 그들 삶의 자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싫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이고 프로답지 못한 자세였기에 아직까지도 실망감으로 남아 있다.

또 하나의 자산은 '근면의 미학'이다.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천연자원이 풍부해서인지 저녁이 되면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경제활동을 접는 것을 보고 하루 24시간 중 황금 같은 저녁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여유로움이 부럽기보다는 왠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선진국이기는 하나 강대국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떤가? 손님들이 오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도 해 주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경제활동을 하는 성실한 국민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닌가? 또한 근대화를 받아들여 가장 빠르고 비약적으로 성공한 유일한 나라도 역시 대한민국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독특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였다고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다. 어려웠던 시절 배를 주리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중동으로 근로자를 보내고,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검찰이 지향하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할 소중한 정신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비난을 사회에 돌리는 소인배가 되지 말고 선비처럼 자신을 추스르며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오늘의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쯤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안명원

한발 양보만이 해법이다

빛고을 유사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천막농성 6개월이 되기까지 전당건립추진단과 공대위는 해법을 찾기에 골몰해 왔으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시민대토론회가 열렸지만 이날도 양측의 팽팽한 입장만 확인한 채 한 가닥 기대를 건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이어 28일 공대위는 회견을 통해 원점 고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진단장 해임까지 들고 나왔다.

'문화가 밥이 될까' 의아하면서도 광주시민은 예향, 미향, 의향, 민주화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한편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니 문화가 경쟁력이고 돈이 된다는 발상으로 문화수도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는 도청이 옮김으로서 필연적인 구도심 공동화를 대비하는 방편으로 핵심시설인 문화전당을 구 도청 자리로 정하기도 했다. 지금 구도심 동구 주민은 계획대로 완성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며 도청주변 상인들은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변경, 축소는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때 돌출문제가 없이 전 시민이 결집해 똘똘 뭉쳐도 어려울 진데 이런 빌미를 주고 어떻게 계획대로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단체장이나 정치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자자손손 광주 미래를 담보한 모처럼의 큰 사업을 그르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함을 알아야 한다.

5·18 민주정신을 담기 위해 지상이 아닌 지하로 설계된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갈등과 시간 낭비로 차질을 빚어 왔다. 문제가 될 때는 특정단체의 후환이 염려된다.

6개월 전에 야기된 부속건물이냐 별관이냐를 떠나 어떠한 쟁점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양보만이 해법이다. 언제쯤 어떤 모양으로 완성돼 구도심이 살아나고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련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계획대로 진행한 것만이 최선책이다. 문화중심도시로의 전체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문화전당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어져야 한다.

지역의 장래가 좌우되는 현안이 혼미를 거듭함에도 누구하나 나서는 인사가 없다. 모두 다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레 침묵이다. 잘 나서던 시민단체도, 광주시장도, 대표기구인 의회도, 오랜 공석 끝에 임명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의 행보도 느린 걸음이다. 이 쯤 되면 지역원로의 중재도 있을 법 한데 모두 강건너 불이다. 초장에 껐어야 할 불을 키우지는 않았는지? 만시지탄이나 추진단장의 창조적 대안도 공감이 간다는 여론이다.

지금 우리시민이 할 일은 계획대로 완성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세계적 명소를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이전투구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누구도 나서길 꺼리고 보고만 있는 시민 모두가 피해가 될 '승자 없는 샷바 싸움'은 그만 끝냈으면 한다. 〈학문당 대표·자유기고가〉

김치 나트륨 함량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없나

김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다. 김치는 그 자체가 건강식일뿐만 아니라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김밥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김치는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유산균 등 유기산이 풍부해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 의하면 김치를 통해 섭취하는 나트륨 양이 너무 많아 문제라는 것이다. 건강을 말할 때 음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짜게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음식을 짜게 먹을 경우 고혈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치가 고혈압의 원인인 나트륨 섭취를 높이는 음식이라고 해서 신세대들은 꺼린다고 한다.

김치의 국제화를 앞두고 이같은 오명을 씻겨줄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추김치에 정제염, 구운 소금, 키토산 코팅 소금 등 각기 다른 소금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고, 나트륨 흡수량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김치가 이런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금동

타 대학 흠집 내고 거짓정보 흘리는 입시 경쟁 삼가야

수능시험이 끝났다. 올해 입시를 치른 동생의 진학상담을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가 큰 실망을 했다.

인터넷에는 다른 대학을 비방하면서 학과나 교풍 등을 흠집내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 아예 대학 서열이 게시돼 있고, 언론에서 보도한 대기업 임직원 수, 검사와 판사 배출 등이 주요 홍보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욕설과 비방에 대해 그래도 생각있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지성인답지 못하다'고 꾸짖고 '캠퍼스 훌리건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입시철이 다가오고 예비 대학생들의 수능시험과 입학 전형이 진행될 때까지 자신의 학교를 홍보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주려는 대학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학교를 비방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입시생들에게 전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야비한 행위가 아닐까.

더구나 이런 글은 대학 간판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결국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비이성적 면을 심어줄 것이다. 이같은 빗나간 애교심은 진정 지성인답지 못하다.

▲이주은·광주시 서구 마륵동

사설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정부가 앞장서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농어촌 우수고에 특목고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선진화된 학교 육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다. 뒤늦었지만 극심한 인구 감소로 교육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남 농어촌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출산율 저하와 이농으로 폐교가 늘고 있고, 도시 학생과의 학력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매년 중고생 1천명 이상이 '학교 부적응'과 '가사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학부모의 절반 이상은 도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우수 교사, 학교시설, 좋은 학원 등이 있는 도시로 이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전남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은 7명, 교원 1인당 학생은 6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어촌의 교육기반 붕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흔들린 것이 원인이다. 이미 학교와 교사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단계다. 전남도 등 해당 자치단체가 뒤늦게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농어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 통폐합 등은 일관성 없이 추진돼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면서도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한 것이다.

해결책은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 차별화된 지원과 도시 학교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농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활성화가 지역발전방안의 핵심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고질병 한심하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어기게 됐다.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했지만 예산 심사절차를 감안하면 법정시한인 2일까지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규정한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임의조항이라기보다는 강제조항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법정시한에 반드시 통과시켜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기억은 거의 없다. 1990년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겨왔다. 헌법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법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여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예산 편성과 법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예산안의 의미는 각별하다. 경제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는 온통 빨간불이다. 경제성장률과 소득, 고용, 심지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발(發) 경기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이 다짐한 민생국회는 이미 실종됐다. 끝없는 정쟁으로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오죽하면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비난이 나오겠는가. 여야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고 파행을 거듭해선 국회 무용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無等鼓

존엄사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 피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잘 죽는 게 아닐까. 일종의 '웰 다잉'(Well Dying)이다. 유교의 고전 상서(尙書)는 행복한 삶의 덕목인 5복(福)중 하나로 '고종명'(考終命)을 꼽았다. 한마디로 '잘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또 다른 5복 중 하나인 장수의 복(壽福)을 누리기는 훨씬 쉬워졌다. 반면 진정한 '고종명'은 오히려 어렵게 됐다. 일종의 딜레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 등 생명보조장치에 의해 연명하는 환자가 국내에서만 연간 수천명이다. 제명대로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은밀히 통용되는 것이 이른바 '소생술거부 제도'. 영어로는 'Do Not Resuscitate'. 바로 'DNR'이다. 환자나 가족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경우 일체의 생명 연장 의료 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서약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DNR이 불법이다. DNR은 '최선의 진료를 다한다'는 의료법 규정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남용의 소지도 크다.

"죽을 병이 오면 나는 어떤 의사도 곁에 없기를 바란다. 죽음이 다가오면 나는 음식과 마실 것을 끊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에 조용함, 위엄, 이해, 기쁨과 평화로움을 갖춰 (나의) 죽음의 경험을 나누기 바란다."

미국의 자연주의자 스콧 니어링(1988년 99세로 사망)은 그의 생애에 걸맞게 이런 유서를 남겼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잘 죽고 싶은 것은 누구나 바라는 마지막 소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의 75세 노인에 대해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내 첫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 의미지만 존엄사의 권리가 국내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앞으로도 논란은 뜨겁겠지만 존엄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볼 때이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회1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